

전남에 햇빛소득마을 500개 조성... 에너지복지 확대 속도

정부 확산 정책 선제 대응...내년 공모 준비 본격화 주민참여형 태양광으로 소득·재생에너지 동시 확대

전남도가 2030년까지 도내 전역에 ‘햇빛 소득마을’ 500개소를 조성해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확산과 에너지복지 실현에 나선다. 정부가 추진하는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정책에 발맞춰 시·군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도내 22개 시·군과 영상회의를 열고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내년 초 예정된 정부 공모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2030년

까지 전국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년 100개소씩 총 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공모 준비 단계부터 선정 이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에너지정책 과정을 단장으로 하는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군별 후보지 발굴, 주민 설명과 컨설팅, 사업계획 수립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미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1차 수요조사를 통해 150여 개 희망 마을을 발굴했으며, 2차 추가 조사를 거쳐 총 500여 개소의 후보지를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내년 1월부터는 희망 마을을 대상으로 부지 적정성 검토와 사업성 분석 등 현장 중심의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 공모가 내년 2월 예정된 만큼, 도는 공모 대응 역량을 집중해 최대한 많은 마을이 선정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계통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도 병행된

다. 전남 전역이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돼 있어 계통 연계에 제약이 있지만, 주민참여형 태양광 등 공공·공익 목적 발전사업에 대해 계통 우선 접속을 허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을 활용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를 통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조달 구조 개선도 과제로 제시됐다. 태양광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까지 정부의 장기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하지만, 마을공동체 중심의 협동조합은 담보 확

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출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전남도는 대출 담보 요건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정현규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햇빛 소득마을은 주민이 주도해 재생에너지 확산에 직접 참여하는 지역주도형 사업”이라며 “마을 공동체가 유휴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4일 서구 풍암동에 마련된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堂)’ 개소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광주 풍암동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 문 열어

216㎡ 규모...북카페·VR존·노래방 등 여가활동 시설 갖춰 북구·광산구·남구 이어 네번째...내년 계림동 등 3곳 추가

광주 서구에 청소년자율공간 ‘다같이 즐겁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개소한 북구, 광산구, 남구에 이어 서구에 네 번째로 청소년자율공간이 마련된 것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풍암동에 하고, 개업까지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마련, 전날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 곳은 서구의 첫 청소년자율공간으로, 지난해 문을 연 북구 임동, 광산구 비아동과 올해 6월 개소한 남구 진월동에 이은 네 번째 청소년공간이다. 이 공간은 청소년이 무료로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 공간은 청소년이 무료로 쉬고, 공부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다. 풍암동 한 아파트 관리동 3층 216㎡ 면적에 청소년 전용 라운지, 북카페, 노래방, 포토부스, 가상현실(VR)존, 게임존 등을 갖춰 다양한 체험과 여가활동을 제공한다. 청소년자율공간은 청소년이 주체가 돼 공간 구성과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후 해당 공간이 단순한 휴식처를 넘어 청소년 주도 정책 실현의 플랫폼이자 자율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는 내년 상반기에 동구 계림동, 북구 동림동, 광산구 흑석동에 3개소가 추가 개소·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역 간 청소년 활동 격차를 줄이고, 생활권 중심의 청소년 전용공간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강기정 시장은 “이름처럼 다 같이 즐거운 서구 청소년 자율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쉬고, 즐겁게 생활하며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방향 모색’ 포럼

민형배 의원, 28일 오전 7시 조선대 입학식 3층 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사진)은 오는 28일 오전 7시 조선대학교 입학식 3층 세미나실에서 광주문화예술혁신포럼 준비위원회와 조선대학교 과학기술융합학과와 공동으로 ‘AI시대, 광주문화예술 혁신 포럼’을 연다.

‘광주문화예술의 생산과 향유, 그리고 산업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AI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광주문화예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계, 연구자, 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천득업 전남대 명예교수(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가 ‘문화도시 광주의 성찰과 미래전략’을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 최종일 조선대 경제학과 교수가 ‘AI 시대, 광주문화산업의 활로 찾기’를 주제로 발제한다.



열린토론 세션에서는 황봉년 작가의 사회로 분야별 토론과 참석자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토론자로선 △코텐

츠 분야 고미야 유키스 대표(광주창작콘텐츠산업협회 회장) △문화예술 분야 박진현 광주일보 국장 △인문도시 분야 이동운 조선대 교수 △공영예술 분야 최영화 호남대 교수 △시각예술 분야 백종옥 생대미술연구소 소장 △월드뮤직축제 분야 장용석 독립기획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분야 정성구 도시문화집단CS 박사가 참석한다.

민형배 의원은 “AI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광주 문화예술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할 때”라며 “현장 예술가, 연구자, 기획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문화 정책과 입법 과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이광일 부의장, 도시가스 사각지대 해소 촉구

여수 미공급 지역 대책 필요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사진)은 “도시가스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겨울을 버티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라며 여수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겨울은 누군가에게는 외투 하나 더 걸치면 되는 계절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난방비와 생계 걱정을 함께 견뎌야 하는 시간”이라며 “난방을 한 번 더 켜기 전에 비용부터 계산해야 하고, 연료가 떨어질까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텨야 하는 지역이 어느 곳에도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8월 돌산읍 우두리 주민들과 도시가스 공급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연 사실을 언급하며 “여수시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90%를 넘지만, 돌산 우두리 단독주택 지역의 보급률은 36%에 그쳤다”며 “같은 여수 안에서 난방 여건의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돌산만의 이야기가 아



니다”며 “울촌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1.3%에 불과하고, 여수시 전체 보급률 역시 91.6%로 인근 목포·광양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삼산면, 울촌면, 화정면, 화양면, 남면 등 도사·읍면지역에는 여전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못한 곳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부의장은 “농촌과 도서 지역의 난방비 부담은 도시보다 훨씬 크고, 이는 에너지 문제가 곧 생활의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스난방은 사치가 아니라 기본적인 주거 여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배고파서 세상 등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난방비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공감을 표하며, “추위와 생계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돌산에서 시작된 논의를 여수 전역으로 넓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전반에 대한 공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시민 체감 적극행정 성과 빛났다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발생 당시 신속한 피해조사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낸 사례와 도로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페아스콘을 재활용해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 성과를 거둔 사례가 하반기 광주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제3차 적극행정위원회’는 최근 시청에서 회의를 열고, 하반기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적극행정 성과를 심사해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민과 부서 추천을 통해 접수된 9건 중 실적 검증과 예산심사를 거쳐 5건이 본선에 올라,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선심사를 통해 최종 순

처리 예산을 절감했으며, 약 2만4000t의 페아스콘을 재활용해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보호 효과를 거뒀다. 아울러 절감된 예산을 도로보수에 재투자해 도로파임(포트홀)을 줄이고 시민 안전을 강화했으며, 관련 민원 감소로까지 이어져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광주 방문의 해, 전국 150개 뮤지엄을 품다! 2025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유치·개최(문화유산자원과, 박영재 학예연구사) △행정청에 AI를 도입해 업무에 혁신과 편리를 더하다(데이터정보화담당관, 김성훈 주무관·이은희 사무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산업단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선정 특별재난지역 선포·페아스콘 재활용사례 등

위(우대등급)가 결정됐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광주시 주도적 호우피해 조사를 통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견인고 복구 및 예방 대책 수립(자연재난과 박승현 주무관)은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신속한 피해 조사와 자치구 긴급지원반 운영을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국비 확보로 지방재정 부담을 줄였으며 신속 복구와 침수 예방 등 지속할 수 있는 재난 예방 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사례인 △페아스콘 재활용 활성화로 환경보호·예산절감·민원감소, 세 마리 토끼를 한 번에!(종합건설본부 김진수 주무관)는 도로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페아스콘을 단순 폐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유·무상 공급체계를 도입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억 원의 폐기물

지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다(광주경제자유구역청, 서지민 주무관)가 각각 선정됐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유치’ 사례는 전액 국비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문화기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대 1 맞춤형 상담과 비용 감면 방안을 도입해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 점이 성과로 인정됐다.

‘인공지능(AI) 행정혁신’ 사례는 민간의 우수 인공지능(AI) 기술과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연계해 청사 출입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인공지능(AI) 기반 행정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인 점이 평가됐다.

‘산업단지 규제 완화’ 사례는 입주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관리기본계획의 단서조항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애로를 해소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광주, 비상대비훈련 돋보여...‘대통령 표창’

위기관리·통합방위태세 역량 인정...국가 평가서 우수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비상대비훈련(을지연습)’ 평가에서 유공 기관으로 선정돼 최고등급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난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2025년 을지연습’에 대한 중앙평가관의 종합평가 결과이다. 을지연습은 국가 위기 상황을 가정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대표적 비상대비훈련이다.

광주시는 훈련 기간 위기관리 대응체계의 신속한 가동, 전시 전한 절차의 체계적 이행, 전면전 대비 태세 확립, 테러 및 복합재난 상황에 대한 실전형 대응훈련을 안정적으로 수행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통합방위태세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고, 중무체계를 내실 있게 수립·운영했으며, 동원자원 관리체계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등 비상대비 업무 전반에서 우수한 대응 역량을 입증한 점이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

김준영 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대통령 기관 표창은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광주시의 대응 능력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훈련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더욱 튼튼한 비상대비태세를 구축,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